

#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병원 노동자들의 2차 파업을 지지한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

병원의 영리 행위는 의료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법률의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려 한다. 법률 개정이 아니므로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자회사 설립도 정부 가이드라인만 발표해 허용하려 한다.

하반기에는 의료기관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친박계인 유정복이 인천 시장에 당선된 직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가 3만 건이 넘고 보건복지부 웹사이트에도 5만여 명이 반대 의견을 달았다.

최근에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서울대병원의 자회사 '헬스커넥트'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회사에 '투기성 자본이 달려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에당초 박근혜 정부가 이런 꿈을 쓴 까닭은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이 광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다.

공공연히 법률을 뜯어고치기보다는 '영리 자회사'나 '부대사업 확대'니 하는 복잡한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속임수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

지난 6월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에 68.6퍼센트가 반대했다. 수익 목적의 부대사업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도 66.6퍼센트가 반대했다.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지도 않고 추진하는 데는 74.1퍼센트가 반대했다.

이는 의료 민영화 반대 진영이 상반기 내내 벌여 온 활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6월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의 파업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



는 광범한 여론을 결집시키는 초점 구실을 했다.

평일 한낮에 도심을 가로지른 노동자 수천 명의 행진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 줬다. 6~7월로 이어진 민주노총의 투쟁에서도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은 중요한 버팀목 구실을 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자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는 파업을 선포했다. 두 노조가 참가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도 이런 상황에서 각종 활동을 벌여 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시작한 의료 민영화 반대 1백만 서명 운동에 지금까지 60만 명이 참가했다.

지난 4월 시작하겠다고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7월이 다 지나가도록 시작도 못했다. 의사 파업을 막으려고 정부가 늘어난 약속이 사실상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의사협회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생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는 이윤 지상 체제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단적으로 보여 줬다. 박근혜의 거짓말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싸늘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의료에서 이윤 논리를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면 또 다른 재앙을 낳을 것이라는 경고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계급과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건강을 지키고자 나선 파업

투쟁은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병원 노동자들의 2차 파업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하반기 투쟁에도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도 “7월 22일부터 진행되는 2차 산별 총파업과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을 폐기시키기 위한 8월 총파업까지 함께하자”고 호소한 바 있다.

1백만 서명 운동을 비롯해 정부의 의료 민영화 강행에 맞선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의 투쟁도 계속 될 것이다. 지금까지처럼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의 대중 투쟁은 이 투쟁의 엔진 구실을 할 것이다. 시도 단위를 넘어 시군구 단위로 확대되고 있는 지역대책위도 더 활성화돼야 한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MARXISM 맑시즘 2014**

패널 토론 **이윤에 희생되는 건강 — 또 다른 재앙, 의료민영화**  
 패널 토론 **공공병원 축소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미국의 의료 민영화 역사와 한국의 의료 현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marxism.or.kr](http://www.marxism.or.kr)에서 확인하세요.

# “8월에 전면파업을 할 겁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며 38개 '방만 기관'을 지정했습니다. 그 중 18개는 과도 부채 사업장, 20개는 과도 복리후생 사업장인데, 우리 병원은 후자에 포함됐어요.

우리 병원의 복리후생비는 1년에 4백만 원 정도인데, 한 달에 4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방만경영이라니요.

알아보니, 경영진이 집행되지 않은 예산까지 포함시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복리후생 예산이 1인당 1년에 6백88만원으로 뒀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은 적이 없어요.

정부는 우리 보고 철밥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라는 복리후생비 다 합치면 1천6백억 원이예요. 전체 공공기관 부채가 5백조 원이죠. 0.03퍼센트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부채가 2백3조 원 늘었어요. 이 부채를 누가 만들었

나요? 4대강 다 썩었고 벌레 사는데, 그런 책임을 먼저 묻고 그 뒤에 공공기관에 뭐 해라 하든가 이래야 하는데, 무조건 노동자 때문이라고 여론을 만들어요.

사측은 지금 60퍼센트를 받도록 돼 있는 퇴직수당을 39퍼센트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공무원 기준으로 바꾸자는 거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39퍼센트를 받아도 우리가 60퍼센트 받는 것보다 더 많습니 다. 퇴직수당은 연금 액수를 기준으로 받는데 우리는 국민연금을 받거든요. 퇴직 때까지 계산하니깐 1인당 평균 5백만 원 정도 깎여요.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 수준으로 다 바꾸라면서 정작 공무원으로 해 주지는 않아요. 1994년에 공무원 지위 포기하게 하고 병원을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숫자만 [퇴직수당 비율]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면 다른 국립대병원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행동하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병원 작업장에 사실 인력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명만 빠지면 일이 안 되는 것 아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려면 전면파업 하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병원은 8월부터 전면파업을 할 예정이에요.

국립대병원 노조들은 의료연대 소속도 있어서 같이 연대도 해야 해요.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사람들 만나서 같이 하자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원자력병원, 보건병원도 공공기관입니다. 이런 지부들도 결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는 김에 의료원도 같이 하자. 일단 파업을 하든 뭘 하든 효과를 확실히 내자는 거예요. 안 불편하면 파업이 아니잖아요?

» 앞면에서 이어짐

첫째, 공공부문 '정상화' 정책으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공격하고 있다. 원자력의학원 등 공공 의료기관의 기능 축소와 의료의 질 저하는 병원들이 돈벌이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다. 진주의료원에 이어 강원도 등지에서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공격도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가짜 '정상화'와 지방의료원 민영화에 맞선 투쟁도 계속돼야 한다.

둘째,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와 고려대병원의 '기술지주회사' 등 대학 병원들이 앞장서서 실제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법적 정당성이 약하더라도 일단 실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영리 자회사는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비정규직을 늘릴 것이다.

셋째, 사립대병원이나 민간 대형병원들도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 외주화를 추진할 것이고, 이는 정리해고를 동반할 것이다. 경희의료원은 식당 업무를 외주화하려고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 민영화에 맞선 투쟁은 개별 병원에서 벌어지는 공격에 맞선 투쟁과 연결돼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결코 무적이 아니다. 병원 노동자들은 두 차례 파업을 통해 투쟁할 수 있는 자심감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다.

하반기에도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이다.



## 영리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 국립대병원 10곳의 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구실을 한다. 이는 사립대병원과 민간 병원 운영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그 점에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자회사인 '헬스커넥트'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싸워 온 것은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서울대병원이 이미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다른 의료법인들에도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

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노조가 헬스커넥트의 문제점들을 폭로하며 그 정당성이 크게 약화됐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헬스커넥트가 서울대병원 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형식적으로는 서울대병원의 자회사이지만 SK의 지분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이는 영리 자회사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줬

다.

결국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헬스커넥트'가 서울대병원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일부 위법성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영리 자회사 헬스커넥트, 부대 사업 확대를 위한 첨단외래센터 건립 추진 등 서울대병원이 앞장서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을 노조가 문제 삼자, 서울대병원 측은 "지금 멈출 수 없다. 서울대병원

은 달리는 자전거와 같다. 멈추면 쓰러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이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 멈춰 쓰러져야, 평범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대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과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향후 다른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노동자 정치 신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 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http://wspaper.org>

**노동자 연대** 를 읽고 함께 토론합시다

(노동자 연대)는 곳곳의 주요 노동자 투쟁 소식과 운동의 전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동자 연대)를 읽고 토론할 동지들을 기다립니다. 연락주십시오.

문의: 010-2230-5707(장호중)